

송미령 “농촌소멸, 창업·주택·자금 지원해 위기 대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전략
시·군,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8일 농촌소멸 문제와 관련해 위기에 잘 대처할 시 도시, 농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전회위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또 저출산 문제 타개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열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을 통해 농촌이 국민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농촌’을 모토로 3대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청년층과 혁신가, 기업가, 농업인 등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이다. 둘째, 농촌공간 테스트베드와 등 농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스마트 공간’이다. 셋째, 주거·산업·서비스 등이 집적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네트워크 공간’이다.

정부는 청년들의 농업 및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등 농업생산 뿐만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이 28일 세종 여진동 정부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농식품부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및 보금자리주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Agribiz+)을 육성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시·군 단위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해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제 도입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과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입지 규제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

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3헥타르(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전국 2만1000ha 추정)하고, 사유지 산지 중에서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사용제한 지역(36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자체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전용 허가기준 범위도 기존 10%에서 2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의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해 채류·정주 등의 인프라를 혁신한다. 농지에 농촌 채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도 조성한다.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및 보건소 등을 통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 돌봄마을 조성도 확대 추진한다.

/세종=김연수 기자 kys@metroseoul.co.kr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8개월째 내리막

고용부,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8개월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사업체 노동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59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1983만1000명)보다 23만2000명(+1.2%) 늘었다.

사업체 종사자는 2021년 12월 전년 동기 대비 108만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폭이 감소 추세다. 2023년 6월 41만7000명까지 감쪽 상승했으나,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1만7000명(+0.7%), 임시일용근로자는 9만명(+4.9%) 증가했다.

지역별로 경기(+10만1000명), 경남(+2만6000명) 등 대부분 지역에서 종사자가 증가했다. 종사자 수 증감률은 세종(+5.9%)이 가장 높고, 이어 전남(+2.9%), 충남(+2.6%) 순이다.

분야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4.3%(+9.7만명)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 +3.0만명), 도매 및 소매업(0.7%, +1.6만명) 순이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0.5%, -6000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8%, -1000명) 순으로 감소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약19%)은 1만4000명 증가했다.

2월 중 입직자는 89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4000명(-5.7%), 이직자는 88만4000명으로 3만6000명(-3.9%) 각각 감소했다.

자발적 이직은 29만9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13.1%) 감소한 반면, 비자발적 이직은 48만명으로 1만3000명(+2.7%) 증가했다.

채용이 증가한 분야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000명), 운수 및 창고업(+4000명) 순,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1만8000명), 건설업(-1만1000명) 순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울 인천에 수소버스 505대 보급 계획

환경부, 충전시설 구축 등 방안 논의

정부가 올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인 수소버스의 30%가량이 인천에 배당된다. 환경부와 인천시는 29일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지역 버스기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수소버스 전환 이행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인천시는 올해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 목표인 1720대 중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대 물량인 505대(29.4%)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액화수소플랜트와 수소충전소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 등 수소버스 생태계 선도도시를 겨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수소버스 충전 기반 시설(인프라)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운수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인천광역시에서 수소버스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수소버스 전환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소버스 정비와 충전 시설이 뒷받침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소버스 제작사-수소충전소 구축·설비사, 수소버스 운수사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57% 중대재해 대응 ‘취약’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계획 발표
내달 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목표

5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이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라, 준비가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사업장 안전수준에 대한 핵심 항목 10개에 대해 자가진단해 진단 결과는 빨강, 노랑, 초록으로 제시하고, 진단결과가 빨강, 노랑으로 나오면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을 해준다.

지금까지 자가진단을 완료한 21만건 중 지원이 필요한 빨강, 노랑 진단결과를 받은 비율은 57.1%, 초록 진단을 받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은



6일 서울 중구 신당누리센터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42.9%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가 미흡한 업종은 제조업, 기타업종, 건설업 순이었고,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지원신청 사업은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순으로 많았고, 세부사업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수요가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후 사망자가 발생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33개 중 6개소는 이번 대진단을 통해 정부지원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자가진단 참여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4월말까지 자가진단 45만건, 정부지원신청 사업장 30만개소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집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3월부터 자가진단 및 정부지원 신청 사업장 증가추세가 뚜렷해졌다”며 “현장의견을 반영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사업 품질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제작년 고금리·규제 여파에 ‘빚’ 첫 감소

통계청, ‘임금근로자 부채’ 발표

제작년 기준 직장인들 평균 빚이 역대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은행 금리가 크게 댄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신규대출이 급감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차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115만 원으로 전년(5202만 원) 대비 97만 원(1.7%) 감소했다.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개인이시중은행 또는 비은행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잔액의 합을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가리킨다.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매해 2017년 12월(3974만 원)에서 2019년(4408만 원) 크게 증가한 뒤 2021년에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역대 첫 감소를 기록하게 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리가 2017년부터 1%대였는데 2022년도 하반기에 많이 오르면서 대출이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11월 1.0%에서 2022년 11월에는 3.25%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를 조이면서 신규대출이 억제된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수 기자